

2010 국회 8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0. 8. 14 시행)

<출제평>

문제의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한마디로 변별력과 난이도를 갖춘 완성도 높은 출제였다. 대부분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정형화된 수준을 탈피하여 깊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다(문14의 공무원 징계의 종류, 문22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23의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등),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관련 이론을 종합하여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문9의 정책평가 타당도 저해요인, 문10의 동기이론, 문12의 예산의 원칙, 문15의 행정이론 종합, 문19의 정책문제의 구조화, 문21의 예산원칙, 문24의 행정현상 종합, 특히 D.Kettle의 대리정부론).

또한 그간 시험에서 한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문제가 출제되었다.(문1, B.Bozeman의 공공성이론(선행정학 p.39), 문16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론(선행정학 p.548, 문20의 Osborne & Gaebler의 기업형정부 구축을 위한 5C전략(선행정학 p.199), 문24의 3번지문 대리정부론(선행정학 p.518) 등). 이들 문제들은 그간의 시험에서는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기존 문헌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었다. 아울러 문제 하나를 통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박스형 문제를 다수 출제함으로써 이번엔 최초로 시험시간을 분리하여 실시한 취지에 맞게 다른 시험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중첩된 주제를 다룬 문제가 일부 있었다는 점(문12와 문21의 예산의 원칙 문제)과 지방자치편에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점(국회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듯)이 좀 아쉬운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상당한 난이도를 보여준 출제였으나 다행히 2010선행정학 교재에 25문항 모두가 언급되어 있었으며 강의때도 다루었던 내용들이었다. 응시생들의 실력차이를 확연히 가늠할 수 있는 변별력과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좋은 출제였다고 본다.

<연도별·분야별 출제비중>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방
2008	5문	6문	3문	4문	3문	1문	3문
2009	4문	6문	5문	4문	3문	1문	2문
2010	8문	4문	6문	3문	3문	1문	0문

- 김중규 -

1. <보기> 중 Barry Bozeman의 '공공성(publicness)'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사회적 가치는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이다.
 나. 사조직도 흔히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력 하에 있게 된다.
 다.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된다.
 마. 사회적 가치는 행정의 본질적 특징이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답) ④ 가. 라는 틀리다. B.Bozeman은 차원적 접근법(1984)에서 공공성(publicness)의 상대성을 강조한 학자로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공·사구분론을 배격하고 공공성이란 행정에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조직은 공극점과 사극점 사이에 존재하므로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사조직도 어느 정도는 정부규제와 정치적 압력 하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 행정은 사회적 가치(권력, 재화, 기회, 의무, 부담 등)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과 연관된 공공성, 권력성, 정치성, 체제성 등은 공행정에 있어서는 본질적 특성이지만 공(公)과 사(私) 모두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 가치의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라.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 2010 7급 선행정학 p.39

2.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37년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②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③ 경기침체 시 흑자예산을, 경기과열 시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불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⑤ 자본적 지출은 단기적 계획을 요한다.

(답) ② 예산이란 특정시점이 아닌 경기순환 주기전체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 ① 1937년 스웨덴에서 실시한 것이 그 효시이다.
 ③ 경기침체시에는 공채 발행 등 적자예산을, 경기과열시에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
 ④ 자본예산은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세대와 다음세대간의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자본적 지출은 지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비치므로 장기재정계획을 요한다.

★ 2010 7급 선행정학 p.816

3. 선발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의 문제이지만, 타당성은 시험과 기준과의 관계를 말한다.

- ②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타당성의 기준 측면이 되는 것은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등이다.
- ④ 재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답) ⑤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기준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시험의 타당도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 여부	'시험성적' =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 (합격자) 동시적 검증 (재직자)
내용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여부	'능력요소' = 시험내용	내용분석
구성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 고 믿는 '이론적 구성 요소' 측정 여부	'이론적 구성 요소' = 시험내용 '부합' 여부	논리적 추론

❖ 2010 7급 선행정학 p.660

4. 대표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통제의 강화
- ②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의 허구성
- ③ 천부적 자유의 개념과 상충
- ④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의 조장
- ⑤ 대표의 집단이기주의화
- (답) ① 소외집단을 배려하여 할당임용하는 대표관료제는 내재화된 민주통제로서 강력한 내부통제의 수단이 된다. 내부통제의 강화는 대표관료제의 특징 내지는 장점이 지 문제점은 아니다.

❖ 2010 7급 선행정학 p.492

5.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답) ② NPM(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의 독점적 통치를 비판하면서 정부는 방향잡기 강조, 정부역할의 축소, 행정과 민간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신공공관리론(NPM) vs (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 2010 7급 선행정학 p.211

6. <보기>에서 개방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등중국성(equifinality)
 나. 정(+)의 엔트로피
 다. 항상성
 라. 선형적 인과관계
 마. 구조 기능의 다양성
 바. 체제의 진화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답) ③ 나, 바는 틀리다. 나, 마는 개방체제가 아니라 혼돈이론의 특징이다.

나. 개방체제는 체제의 해체와 소멸을 막으려는 부정적 환류에 의한 부정적 엔트로피를 중시한다.

바. 개방체제는 체제와 환경간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정태적 균형이론으로서 체제의 진화와 발전을 설명하는 데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 개방체제론과 혼돈이론의 비교

개방체제론	혼돈이론
등중국성(결과와 동일)	결과도 다를 수 있음
부(-)의 엔트로피	부(-)의 엔트로피 + 정(+)의 엔트로피
항상성	항상성 부정 - 변화와 발전 추구

선형적 인과관계 체제의 안정 혼돈과 무질서 회피	비선형적 (순환고리적) 인과관계 체제의 진화(공진화) 혼돈과 무질서를 회피하지 않음
----------------------------------	--

❖ 2010 7급 선행정학 p.154

7. <보기>와 같은 정책결정 형태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① 엘리트주의
- ② 조합주의
- ③ 이슈네트워크
- ④ 하위정부
- ⑤ 정책공동체

(답) ② 제시문은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조합주의의 특징 -----

- ① 기업가단체(자본), 노동자단체(노동), 정부대표의 삼자연합이 주요경제정책을 결정하지만 정부와 이익집단간 공식합의(상호협력)를 중시하므로 이익집단의 자율성은 제약된다.
- ② 이익집단은 단일적, 강제적, 비경쟁적 조직형태를 띤다.
- ③ 이익집단은 구성원의 이익증진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중시한다.
- ④ 조합주의하에서 이익집단은 준정부기관 또는 확장된 정부기구의 일부로 작용한다(코포라티즘 ; Coporatism)
- ⑤ 정부는 피동적 중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주도적·능동적 실체이며 정부는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 2010 7급 선행정학 p.244

8. 대리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②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참여, 정보공개제도, 공청회,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 ③ 대리손실은 주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이 있다.
- ④ 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인기제, 관료적 통제, 시장적 통제, 규범과 신념의 내재화 등의 방법에 관해 처방한다.

- ⑤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답) ③ 대리손실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며, 이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현상'이 있다. 역선택은 사전손실로서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주인이 대리인을 잘못 선임하는 현상이고, 도덕적 해이는 사후손실로서 대리인이 주인의 감시와 통제를 피해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 2010 7급 선행정학 p.527

9. <보기>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역사요인
나. 회귀인공요인
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마. 측정요인
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사. 측정도구요인
아.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자. 다수 처리의 간섭
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① 2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 ⑤ 8개

(답) ④ 가. 역사요인, 나. 회귀인공요인, 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마. 측정요인, 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사. 측정도구요인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머지는 모두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오돈 효과), 다수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참고>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

- 외재적요소 - 집단 구성(선발)시 발생하는 저해요인 : 선발요소 뿐
- 내재적요소 - 실험(정책)이 진행(집행)되는동안 발생 : 나머지요인

❖ 2010 7급 선행정학 p.359

10.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발로되며, 미충족된 욕구가 동

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② 허즈버그(F. Herzberg)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 충족되더라도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③ 맥그리거(D. McGregor)는 마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을 바탕으로 인간관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 ④ 샤인(E. H.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브룸(V. Vroom)은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는 행위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답) ⑤ 인간행동의 방향과 강도가 행위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Adams의 형평성(공정성)이론이다.
- ★ 2010 7급 선행정학 p.399

11. <보기> 중 정책예측기법 중 하나인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집단사고(group think)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각각 독자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이나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면 접촉하는 모임을 통해 의견의 조율을 꾀한다.
 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마.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

- 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라, 마
 ④ 다, 라, 마
 ⑤ 가, 나, 다

- (답) ① 가, 나, 라만 옳고, 다, 마는 틀리다. 델파이 기법은 해당분야의 익명의 전문가들을 격리시킨 채 독자적으로 형성된 의견이나 판단을 종합·정리하므로 확실적인 집단사고(group think)를 방지할 수 있다. 설문에 정책델파이(policy delphi)라는 명시가 없으므로 일반델파이를 기준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 나, 라는 맞는 지문이다.
- 다.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 접촉하는 모임을 통해 토론과 의견 조율을 꾀하는 것은 정책델파이(policy delphi)이다.
- 마. 피력된 의견이나 판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제시에 집중하는 것은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에 해당한다.
- ★ 2010 7급 선행정학 p.276

12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의 사용금지의 원칙 - 이용·전용
 ②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조상충용
 ④ 명확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⑤ 한계성의 원칙 - 예비비
- (답) ④ 수입대체경비는 완전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명확성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에는 총액계상예산 등이 있다.

● 예산의 원칙 (고전적 원칙)과 예외 -----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예외) 총액계상예산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 2010 7급 선행정학 p.760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수평적 조직구조의 강조, 정보의 균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 ① 구조적 상황적응이론
 ② 조직경제학이론
 ③ 제도화이론
 ④ 카오스이론
 ⑤ 지식정보사회 조직이론
- (답) ② 제시문은 주인-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경제학에서 제시된 처방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인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을 합하여 조직경제학이라고 한다. 시장경제학의 관점을 조직이론에 도입한 것으로 조직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다. 시장 및 위계(位階)이론, 시장실패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이 핵심이다. 두 이론 모두 조직을 근로자와 소유자를 묶는 거래 또는 계약의 결합체로 보고 기본적으로 인간을 시장에서처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Hobbes의 인간관)로 가정하나,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한 합리성의 제한을 설명하며 대리인이론의 경우 그 대안

으로 정보의 균형화,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 절감을 위하여 일의 흐름에 따라 조직을 편제하는 수평적 조직구조(M형 조직)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2010 7급 선행정학 p.526

14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면직은 직제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 ②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아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답)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보수의 2/3을 감한다. 1/3을 감하는 것은 감봉이다.

● 징계의 종류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2009 신설). 1년 6월간 승급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 2010 7급 선행정학 p.701

15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담론이론 - Fox, 구성주의, 대의민주주의 강조
- ② 공공선택론 - Osborne, 시장경제주의, 공공성 강조
- ③ 신행정론 - Frederickson, 가치·규범주의, 형평성 강조

의, 형평성 강조

- ④ 행정행태론 - Simon, 논리실증주의, 대응성 강조
- ⑤ 행정관리론 - Appleby, 정치·행정 분리주의, 능률성 강조

(답) ③ ③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① 담론이론 - Fox & Miller는 정통이론인 대의민주주의와 그 대안인 헌정주의와 공동체주의까지도 비판하면서 최종대안으로 담론이론을 주장하였다. (2010 선행정학개론 p.183)
- ② 공공선택론 - Osborne은 정부재창조에서 기업형 정부를 주장하였으며, 공공선택론은 시장경제주의를 강조하였으나, 공공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공공선택이론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각자 자신의 이득(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로 간주된다.
- ④ 행정행태론 - Simon은 행태론에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동일하다고 보고 자연과학적인 연구방법인 논리실증주의의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행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대응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 ⑤ 행정관리론 - Appleby는 정책과 행정(1949)에서 정치·행정의 연계를 강조한 정치행정일원론자이다. 만약 Appleby 대신 Wilson이라면 맞는 지문이 된다. (2010 선행정학개론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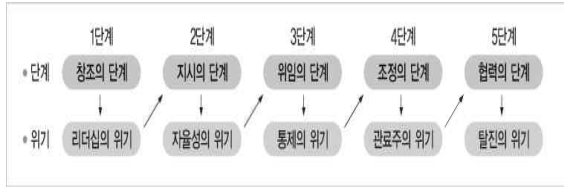
❖ 2010 7급 선행정학 p.34, 146, 164, 177, 183

16 Greiner의 조직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단계의 조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적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 ② 제2단계는 조직성장동력을 담당부서의 전문성 발휘에 둔다.
- ③ 제3단계는 부서의 권한위임을 통해 부서자율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 ④ 제4단계는 분권적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 조정기제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 ⑤ 제5단계는 문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

(답) ① 제1단계(창조의 단계)는 소규모 신설조직단계로서 비공식 조직설계보다는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리더십(창업자)의 위기가 온다.

●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와 위기대응전략



- (1) 제1단계(창조의 단계) : 소규모 신설조직단계로서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리더십(창업자)의 위기가 온다.
- (2) 제2단계(지시의 단계) :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자율성의 위기가 온다.
- (3) 제3단계(위임의 단계) : 자율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의 권한위임에 초점을 두고 조직성장을 추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분권으로 인한 경영위기(통제의 위기)가 온다.
- (4) 제4단계(조정 단계) : 분권적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 조정기제를 바탕으로 통합에 초점을 두고 조직성장을 추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형식주의(문서주의)의 위기가 온다.
- (5) 제5단계(협력의 단계) : 문서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간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및 혁신에 초점을 두고 조직성장을 추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탈진의 위기가 온다.

★ 2010 7급 선행정학 p.548

17.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에서 상정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측면을 강조한다.
 - ②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③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가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한다.
 - ④ 지방정부는 최적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 ⑤ 정보통신 발달 및 생활광역화가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을 높인다.
- (답) ① 티부가설은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의 의미를 가진 발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①의 경우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측면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⑤의 경우 최근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로 생활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짐으로써

‘발로 하는 투표’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 다수의 지역사회(지방정부) 존재 · 완전한 정보 ·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 - 완전한 이동 ·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규모의 경제 작용 X, 규모수익불변 · 외부효과와 부존재 ·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 · 최적규모의 추구 - 규모가 크면 주민 유출, 작으면 주민 유입

★ 2010 7급 선행정학 p.181

18. 순기능적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과다한 정보전달
 - ② 의사전달통로의 변경
 - ③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
 - ④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 ⑤ 구조의 분화
- (답) ③ 적정한 긍정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연기보다는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갈등 조장에 도움이 된다.

★ 2010 7급 선행정학 p.419

19.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계분석 - 문제의 경계추정
 - ② 분류분석 - 개념의 명료화
 - ③ 계층분석 - 가능성 있는 원인 식별
 - ④ 가정분석 - 갈등의 선후관계 판별
 - ⑤ 유추분석 - 유사한 관계 인지
- (답) ④ 가정분석이란 상충(대립)되는 여러 가정을 창조적으로 통합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 정책문제의 구조화 -----

- 경계분석 - 메타문제(문제군, 문제경계)의 추정, 문제의 위치·범위를 찾는 것
- 계층분석 - 문제의 원인을 계층별로 찾는 것
- 분류분석 - 문제상황을 구체적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개념 명료화
- 유추분석 - 유사한 문제간 관계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
- 가정분석 - 대립되는 여러 가정들을 창조적으로 통합

★ 2010 7급 선행정학 p.230

20. D. Osborne과 P. Plastrik이 제시한 「정부혁신의 5가지 전략」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핵심전략 : 정책수립 시 명확한 목표설정

- ② 통제전략 :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투명성 확보
- ③ 결과전략 : 유인책을 통한 성과관리 강조
- ④ 고객전략 : 시민현장 제정을 통한 고객에 대한 책임성 확보
- ⑤ 문화전략 : 공직사회의 기업가적 조직문화 창조
- (답) ② 통제전략이란 관리자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이다.

● 기업형정부의 5가지 혁신전략(5C)

전략	정부개혁수단	접근방법
핵심전략	목적	목표와 방향의 명확화
성과전략	유인체계	경쟁관리, 기업관리, 성과관리
고객전략	책임성	고객의 선택, 경쟁적 선택, 품질확보
통제전략	권한	조직권한위임, 지방사회로의 분권
문화전략	문화	관습타파, 감동정신, 승리정신

★ 2010 7급 선행정학 p.199

21. <보기> 중 미국의 행정학자인 스미스 (Harold D. Smith)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모두 몇 개 인가?

- 가. 한정성의 원칙
 나. 보고의 원칙
 다. 책임의 원칙
 라. 공개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바. 단일의 원칙
 사. 사전의결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자. 완전성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답) ④ H.D Smith는 현대적 예산원칙을 주장한 학자로서 현대적 예산원칙은 다. 책임의 원칙, 마. 계획의 원칙, 아. 재량의 원칙, 차. 시기신축성의 원칙 5개이다. 나머지는 모두 Neumark가 주장한 고전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H.Smith는 1945년 Neumark가 제시한 고전적 원칙을 토대로 예산의 원칙을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으로 구분·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고전적 원칙이라 하면 Neumark의 원칙, 현대적 원칙이라 하면 H.Smith의 예산원칙을 말한다.

● 예산의 원칙

고전적 원칙	현대적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행정부계획의 원칙 ·행정부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	--

★ 2010 7급 선행정학 p.760~764

22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으로 옴부즈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답)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대통령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아직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010 7급 선행정학 p.903

2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⑤ 정부교섭대표는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답) ④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2010 7급 선행정학 p.718~721

24 다음 중 연결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사고(group think) :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타당성 훼손
 - ②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고객의 요구와 만족 강조
 - ③ 대리정부(government by proxy) : 공공서비스제공의 책임과 공공성 훼손
 - ④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 : 무능력자 승진이 조직 효율성 훼손
 - ⑤ Galbraith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 : 공공재 과다공급으로 인한 정부실패 강조
- (답) ⑤ Galbraith의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란 재화의 소비는 선전에 의존하는데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자극되지 않으므로 결국 과소공급된다는 이론이다. ③의 경우 D. Kettle의 대리정부론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대부분을 준정부기관이나 민간이 대신 집행하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경고한 이론으로 맞는 지문이다.

● 공공재의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과소공급	Galbraith의 의존효과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 욕구를 자극 못함
	Duesenberry의 전시효과	민간재는 체면유지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 (과시효과)

설	Musgrave의 조세저항	국민들의 조세저항(재정환상) ¹⁾ 이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 (지불비용보다 편익을 적게 느낀다는 착각)
	Downs의 합리적 무지	합리적 개인들은 공공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하지 않음
과다공급설	Wagner의 경비팽창의 법칙	도시화에 의한 행정수요 팽창
	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대체효과	전쟁 등 위기에 국민들의 조세부담증대의 허용수준이 높아짐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
	보름병환(Baumol's Disease)	정부부문은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빨리 증가
	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자기부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예산 확보
	Buchanan의 리바이어던가설	투표의 거래나 담합(log-rolling)에 의한 사업 팽창
	지출한도의 부재	종결장치 및 가시적인 길항력(拮抗力) 부재
	양출제일의 원리	지출수요에 따라 수입 확대
	간접세 위주의 국가재정구조	조세저항이 회피되어 재정팽창(재정착각)

- 1) Musgrave의 재정착각에 의한 조세저항은 과소공급, A. Wagner의 간접세구조하에서의 재정착각에 의한 조세저항 회피는 과다공급 초래

★ 2010 7급 선행정학 p.81

25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존재
 - ② 외부효과 발생
 - ③ 자연독점
 - ④ 정보의 비대칭성
 - ⑤ 정부규제
- (답) ⑤ 정부규제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이지 정부개입의 정당성의 근거(원인)는 아니다.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이란 시장실패의 원인을 말한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개념	시장실패	정부실패 ¹⁾
원인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독점의 존재 ④ 평균수익의 증가와 평균비용의 감소 * 규모의 경제의 과다 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 (정보의 편재)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조직의 내부성 ²⁾ (기관 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 (비의도적 역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 Wolf의 비시장실패 * 서비스의 무가격성, 무임승차성 ④ X의 비효율성 ⑤ 독점성(경쟁결여) ⑥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⑦ 정보의 불충분(대리손실) *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를 감시 못함
대책	정부규제 및 정부개입 필요	민영화 및 규제완화 필요

- 1)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① 시장에 대한 제한적 지식과 정보 ② 민간부문 반응의 예측 및 통제 불가능성 ③ 정치적 과정에 의한 제약(정책왜곡), ④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도덕적 해이)를 드는 학자(이준구)도 있다.
- 2) 공공재의 주요 특성(외부성,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중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내부성 및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임에 주의해야 한다.

★ 2010 7급 선행정학 p.66